



등록번호	기획감사실-12146
등록일자	2017.08.18.
결재일자	2017.08.18.
공개구분	비공개(5, 6)

주무관	감사계장	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
			결재 2017.8.18. 원안결재
협조자			

세외수입분야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

요 약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7. 6. 19. ~ 7. 7.(15일간)
- 감사대상 : 區 본청 세외수입관리부서 전체
- 감사범위 : 2015. 1. 1. ~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
- 감 사 반 : 감사계장 외 4명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8건(시정 3, 주의 15)

본처분			현지처리		
계	시정	주의	계	시정	주의
2	1	1	16	2	14

- 재정상 조치 : 해당없음
- 신분상 조치 : 3명(주의 3)
- 기 타 : 수범사례 2건, 개선과제 6건



수 영 구
(기획감사실)

목 차

I. 감사개요	1
II. 감사결과	1
III. 종합평가	2
IV. 지적사례	3
V. 수범사례	6
VI. 개선과제	8
VII. 조치계획	15

<< 별첨 >>

1. 처분지시일람표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3. 현지처리요구서
4. 문책공무원 조서

세외수입분야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

2017. 6. 30 ~ 7. 7.(15일간) 실시한 세외수입분야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임.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7. 6. 19. ~ 7. 7.(15일간)
- 감사대상 : 區 본청 세외수입관리부서 전체
- 감사범위 : 2015. 1. 1. ~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처리 전반
- 감 사 반 : 감사계장 외 4명
- 중점감사사항
 - 세외수입 부과·징수 적정 여부
 - 세외수입 부과 면제·감면 적정 여부
 - 체납처분 및 채권확보 등 추진실태
 - 세외수입 상시 모니터링 처리실태
 - 기타 세외수입관리업무 추진실태 등

II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8건(시정 3, 주의 15)

본처분			연지처리		
계	시정	주의	계	시정	주의
2	1	1	16	2	14

- 재정상 조치 : 해당없음
- 신분상 조치 : 3명(주의 3)
- 기 타 : 수범사례 2건, 개선과제 6건

III

종합평가

- “적발위주의 감사 보다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 적법성 보다 정책·제도·시스템 개선 중심의 감사”를 통해 담당직원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함은 물론, 업무경계의 모호함 때문에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 행태를 개선하고자 세외수입분야 관리실태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한 결과,
- 대부분의 세외수입관리부서에서는 구 재정의 주요 세입원 중의 하나인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사용료 등의 각종 세외수입을 개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징수 관리하고 있으며,
-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입환경의 악화로 힘든 여건임에도 세외수입관리부서와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음.
- 그러나 일부 세외수입 담당자의 업무 관리 소홀, 관련법규 및 지침 숙지 부족, 선례답습 행정처리 등으로 세외수입 징수결의서 미결재, 수수료 납입 지연,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미조치 및 법령에서 정한 분할 납부 횟수 초과 산정 등 총 18건의 위법·부당사례가 지적되었음.
- 특히 현년도 세외수입 10월~12월 부과분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등 체납처분 절차 이행 전에 12. 31. 기준으로 익년도 1월에 체납분으로 세무과로 인계함으로써 채권 확보 누수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인계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 일부 부서에서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업무 일체를 세무과로 인계하지 않음으로써 체납 징수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세외수입관리부서와 세무과 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전결 규정과 재무회계규칙의 징수관 직무위임 규정이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규칙 개정이 필요하며,
- 세외수입 현년도와 과년도를 관리하는 부서가 상이함에 따라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체납처분 절차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 세외수입관리부서 담당자에 대한 관심제고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세외수입에 관한 직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세외수입관리부서에서도 부서장은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처분 절차 이행이 적기에 추진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됨.

IV 지적사례

I 사례 1 | 징수결정결의서 미결재

-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며, 구세를 부과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결의하고, 징수부를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규칙」 제46조(지방세 범규적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결정)(규칙 제537호)

☞ 징수결정결의서 미결재 : ○○과 외 ○○개 부서

I 사례 2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일정산 소홀

- 구의 수입이 되는 증명의 발급, 인·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나,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민원발급기”라 한다)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민원발급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된 수수료는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문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및 제8조(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 납부 수수료 납입 지연(1일~5일, 2년간) : ○○○○○과

I 사례 3 | 기초연금 환수금 분할 납부 처리 부적정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하고, 기초연금을 환수할 때에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환수금이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5회 이내, 환수금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회 이내, 환수금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환수금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30회 이내, 환수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36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납부금액 및 분할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문제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1조(환수금의 결정·납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환수금의 분할 납부)

↳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환수금 법정 분납 횟수 초과 산정(최장 97회) : ○○○○○○과

Ⅰ 사례 4 Ⅰ 세외수입 체납자 채권 확보 소홀

- 관계법령에 의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하며,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또한,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문답 「국제징수법」 제24조(압류),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조건)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61건)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미조치 : ○○○○○과
-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등(27건)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미조치 : ○○○○○과

Ⅰ 사례 5 Ⅰ 과오납금 이자 지급 소홀

- 착오납부, 이중납부,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하여야 하며, 반환할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과오납 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방세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문답 「국고금 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과오납금의 이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 ↳ 과오납금 이자 미지급(7건) : ○○○○○과

V**수범사례(2건)****I 수범사례 1 I 세무과****세외수입 고액채납법인 징수 사례**☐ **현황 및 실태**

- 채납자 : (주)☆☆
- 채납액 : 24,016,990원
 - ▷ 세외수입(특별회계 포함) : 23,710,740원
 - ▷ 지방세(자동차세 등) : 306,250원

☐ **추진(수범)내용**

- 채납처분 경과 과정
 - ▷ 재산압류 : 2015. 11. 16.
(물건 : 부산 서구 암남동 산○○-○○ 임야 506.0㎡)
 - ▷ 공매예고 : 2016. 10. 10.
 - ▷ 공매의뢰 : 2016. 12. 07.
 - ▷ 완 납 : 2017. 04. 17.(24,016,990원)
- 채납액 징수 과정
 - ▷ 2015. 7. 1.자 세외수입 전담징수팀이 생기면서 고액채납자 (주)☆☆의 2015년 취득한 물건 발견하여 신속하게 압류하고
 - ▷ 세외수입 채납액은 일반 채권이므로 조세 채권보다 후순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타기관의 조세채권 압류해제(2016. 8. 9.)가 된 후에 바로 공매예고와 공매의뢰를 통하여 전액 징수함.

☐ **기대효과**

-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던 세외수입 채납액을 일반회계 과년도 세외수입 전담징수팀이 생겨 신속한 압류와 공매처분을 진행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타부서들의 세외수입 채납액을 전액 징수함으로써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채납자들의 납부의식을 고취함.

Ⅰ 수범사례 2 Ⅰ 토지정보과

과태료부과대장 관리를 통한 미납자 관리(납부 안내)

□ 현황 및 실태

-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OCR고지서와 함께 사전처분통지서를 민원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의견제출기한(납기일)까지 미납된 경우에는 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추진(수범)내용

- 과태료 부과 후 대상자, 납부상태, 과태료금액, 금액, 부과일자, 납부기한, 위반내용, 연락처, 특이사항을 기재한 과태료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 주기적인 납부확인을 통해 납부기한이 도래한 대상자인 경우, 대상자의 연락처로 납부에 대한 안내(과태료 금액, 가상계좌, 의견제출 등)를 하고 있음.

□ 기대효과

- 납부일자를 잊어버리거나 과태료 고지서를 분실한 민원인에게 관련 안내를 드려, 자진납부를 통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함. 또한 분실, 착오 등으로 인한 미·체납을 줄일 수 있음.

VI 개선과제(6건)

I 개선과제 1 I 검토부서 : 세무과

세외수입 하반기 부과분(10월~12월)에 대한 인계시기 조정

☐ 현황 및 실태

- 세외수입 과년도분 징수업무 처리 주체 : 세무과
- 세외수입 현년도분 부과·징수업무 처리 주체 : 세외수입관리부서
- 세외수입관리부서별 미수납액 자료 인계시기 : 12. 31. 기준, 익년도 1월

☐ 문제점

- 세외수입관리부서별 세외수입 부과분(10월~12월)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등 체납처분 절차 이행 전에 회계연도 종료시점인 12. 31. 기준으로 익년도 1월에 미수납액 자료 일체를 세무과로 인계함에 따라 채권 확보 누수사례 다수 발생

☐ 개선대책

- 세외수입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인계시기 조정
 - ▷ 1월~9월 부과분 : 익년도 1월에 세무과로 인계
 - ▷ 10월~12월 부과분 : 익년도 3월 또는 4월에 세무과로 인계

※ 세외수입관리부서에서는 부과→납부독촉→압류예고→1차 재산압류까지 절차 이행 후 세무과로 인계

☐ 기대효과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향상
- 차질없는 체납처분 절차 이행에 따른 신속한 채권 확보로 체납징수를 제고

Ⅰ 개선과제 2 Ⅰ 검토부서 : 세무과(총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세외수입 체납자(부정수급자 비용징수, 기초연금 등 환수) 분납 처리 관리방안 마련

□ 현황 및 실태

- 세외수입 과년도분에 대한 분납 신청 접수·처리 주체 : 세무과
- 부정수급자 비용징수 과년도분 분납 신청 접수·처리 주체 : 주민생활지원과
- 기초연금 등 환수금 과년도분 분납 신청 접수·처리 주체 : 복지서비스과

□ 문제점

- 세외수입 과년도분에 대한 업무 일체를 세무과로 인계하면 분납 신청 접수·처리로 세무과에서 하여야 하나,
-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의 경우는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납부여건 등을 감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어 세무과에서 직접 처리 곤란
- 실제 세무과에서는 분납 신청시 통상 3회 정도로 처리하는 반면, 주민생활지원과·복지서비스과에서는 몇 년에 걸쳐 분납 처리하고 있어 관리 및 분납 해태 시 체납처분에 대한 부서간 책임한계 불명확
 - ✓ 기초연금환수금의 경우 법정 분납횟수

• 25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5회 이내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20회 이내	• 300만원 이상 : 36회 이내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10회 이내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30회 이내	

□ 개선대책

- 부서간 업무범위 및 책임한계 구분을 위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및 기초연금 등 환수금 체납자 분할 납부 처리 관리방안 마련

□ 기대효과

- 세외수입 체납 징수관리 업무 누수사례 발생 사전 차단

Ⅰ 개선과제 3 Ⅰ 검토부서 : 세무과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전결 규정 개정 검토

□ 현황 및 실태

-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전결 규정과 재무회계규칙의 징수관 직무위임 규정 일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혼선 야기

□ 문제점

-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1]의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 과오납금 환부 : 1,000만원 이상(국장 전결) / 1,000만원 이하(실·과장 전결)
 - ▷ 징수 및 감액 징수결의 : 결의서 1건당 400만원 초과(국장 전결) / 결의서 1건당 400만원 이하(실·과장 전결)
-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 제5조의 징수관 직무위임 사항(실·과장 전결)**
 - ▷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 ▷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 과오납금 반환은 금액과 상관없이 분임징수관이 처리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역시 결의서 1건당이 아닌 부과대상건당으로 해석되는 바 세외수입관리부서에서 결재권자 지정에 혼선 초래

□ 개선대책

-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개정 검토 필요

□ 기대효과

- 세외수입 업무관련 결재권자 지정 혼선 해소로 책임행정 구현

Ⅰ 개선과제 4 Ⅰ 검토부서 : 세무과

OCR고지서의 타 수납방법과 연계를 통한 소인확인방법 개선

□ 현황 및 실태

- 가상계좌수납 또는 e납부와 달리 OCR고지서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했을 때는 수납확인까지 약 7일정도 소요됨.

□ 문제점

- 민원인이 OCR고지서로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납부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최대 7일이 걸려, 과태료 납부안내 및 부과 등 업무에 불편함이 존재함.

□ 개선대책

- OCR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했을 때, 가상계좌 등으로 연계되어 실시간으로 수납확인이 가능할 수 있게 개선.

□ 기대효과

- 과태료 수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면 수납일자가 도래한 과태료는 부과대상자에게 관련 안내를 드릴 수 있어, 민원인의 과태료 체납 등을 줄일 수 있음.

Ⅰ 개선과제 5 Ⅰ 검토부서 : 교통행정과

- 체납자 소유재산(차량) 압류 신속 조치를 위한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 확대

☐ 현황 및 실태

- 세무과에서 연 3~4회 가량 세외수입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 결과를 세외수입관리부서로 통보하여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문제점

- 세무과에서 통보하는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 시 차량정보는 제외됨에 따라 세외수입관리부서에서도 현년도 체납자에 대한 압류 재산에 차량 정보 누락사례 다수 발생
- 세무과 또는 교통행정과에서 세외수입관리부서에 체납자의 차량 정보 일괄 제공 시, 업무 부담 가중

☐ 개선대책

- 세외수입담당자에 대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 확대

☐ 기대효과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제고
- 세외수입 체납자 보유차량에 대한 실시간 조회로 신속한 채권 확보 가능

Ⅰ 개선과제 6 Ⅰ 기획감사실 자체 추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허사업제한 기준금액 하향

☐ 현황 및 실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관허사업제한의 기준금액을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100만원 이상과 상이함.

☐ 문제점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의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기준 금액이 상이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개선대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관허사업제한의 기준금액을 “500만원 이상” 에서 “100만원 이상” 으로 개정하여 개선

☐ 기대효과

- 통일성 있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기준이 마련되어 납세자와 세외수입 징수기관의 혼란을 해소하여 세외수입 징수의 효율화가 기대되고 납세자의 행정신뢰도가 제고됨.

〈법령 개정안〉 질서행위위반규제법

현 행	개 정 안
제52조 【관허사업의 제한】 ①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제52조 【관허사업의 제한】 ① ----- ----- ----- ----- -----.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 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1. ----- ----- ----- -----100만원 이상----- ----- -----

〈법령 개정안〉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500만원"으로 한다.	제11조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① ----- ----- -----"100만원"-----.

VII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감사에 지적된 총 18건에 대하여

- 내용이 경미한 16건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현지처리
- 본처분 2건은 지체없이 시정조치 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엄중 주의 촉구 및 직무교육 실시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7. 10. 13.\(금\)까지 제출](#)
 - 구체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붙임 "처분요구서"에 의하여 처리

■ 신분상 조치

● 문책대상자 3명(주의)은 자체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치

■ 개선과제

- 개선과제 1~5는 검토부서(세무과, 교통행정과 등)에서 적극 반영 조치
 - 조치결과 및 계획은 [2017. 9. 29.\(금\)까지 제출](#)
- 개선과제 6은 기획감사실에서 상급기관 건의 등 자체 추진

■ 건의사항

-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실시(2017년 하반기) : 세무과